

한국의 부가가치세, 45년 만에 증세를 할 지도!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매일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왜냐하면 뭘가를 살 때마다 소비세를 납부하기 때문이지요. 이 소비세는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늘어난 부가가치의 부분에 과세를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외국에서는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1977년에 도입된 이후 세율이 변함없이 10%입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및 경제대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국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19.3%인데, 한국과 일본의 세율은 10%로 그 절반 정도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재정상황이 건전해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증세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현재 급속한 소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세금을 부담하는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지요. 또한, 여기에 코로나 대책이 더해지면서 점점 나라 재정을 압박하게 되니,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같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는 경기가 좋은 나쁜든 세수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상황이 힘들어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만 합니다. 즉, 소비를 하지요. 그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자동적으로 내게

되고, 이것이 나라와 지방의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는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세율이 낮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에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도 줄어들지요. 그렇기에, 확실하게 세수가 들어오는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여, 소자 고령화와 경기 대책의 중요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웬지 일본과 비슷한 고민이네요.

김근삼(시가쿠칸대학)